

세계적 차원의 일자리 문제와 고용률 70% - 중산층 70%의 위상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국경 없는 시장의 확대로 세계 각국의 기업들은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한 극심한 경쟁 환경 속에 놓여 있다.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 전 세계의 기업 4,793곳 중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5%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록한 기업의 수는 고작 10개뿐이고, 순이익과 매출이 함께 5% 이상 늘어난 곳은 5개에 불과하다고 한다. 기업들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 경영하고 있는지 짐작할 만하다.

그런가 하면 고용안정의 세계적인 수범 사례로 인용되곤 하던 유럽국가들에서도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 파견근로 등 비정규직이 늘고 저임금근로자가 늘어 빈곤이 심화되면서 복지재정을 위협하고 있다. 유럽에서 가장 상황이 좋다는 독일에서는 지난 7년간 경제활동인구가 6.8% 증가했고 실업률은 11.3%에서 5.3%로 하락했다. 하지만 고용의 질은 급전직하하고 있다. 전체 고용의 38%가 비정규직이고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20.6%에 이른다.

중국에서는 성장률이 둔화되었다고는 하나 7%를 상회하는 고성장이 지속되고 신규취업자 수가 1,200만 명을 상회하였다. 하지만 2013년에 이에 상응하는 신규취업자 수의 증가가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노동공급 증가전망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1,0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의 2012년 12월의 경제활동인구는 1997년 6월보다 무려 325만 명이나 적다. 엔화 가치를 낮추는 통화정책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지만 파견근로자,

프리터로 일컫는 비정규직 증가와 노령화에 따른 복지재정 증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위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세계경제를 선도해 온 미국에서도 고용회복은 미미하고 장애급여(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수급자만도 생산가능인구의 5%에 이르는 등 복지재정이 위협받고 있다.

세계경제 여건은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양극화 경향을 완화하기 위한 국내 정책 여지를 제약하고 있다. 국제적 정책공조에도 호의적이지 않고 불확실성도 크다.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2009년 중반에 다소간의 회복기미를 보였지만 다시 침체기조로 돌아서 위기를 지속하고 있다. 2009년 적극적 재정지출로 대응했던 각국은 유럽 재정위기 이후 재정적자를 대폭 줄이면서 세계경제는 저성장 경로로 진입했다.

미국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내수와 높은 실업률을 겪고 3차 양적완화를 실시했다. 게다가 재정절벽(정부지출이 감소하고 세제혜택이 끝나 경제에 충격이 오는 현상) 위기를 미봉하긴 했지만 재정절벽 위험과 신용 추락의 우려를 여전히 안고 있다. 유럽에서는 그리스발 재정위기가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로 확산되면서 유로존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향후 유로존이 안정적인 틀을 모색해 가겠지만 그 과정에서 다시 위기가 전염되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패와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중국에서는 수출시장 축소와 불충분한 내수 증가로 성장률이 둔화하는 과정에서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글로벌 리스크가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세계경제가 장기적인 불황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은 커 보인다. 유로존이 붕괴하지는 않더라도 통화통합에서 재정·금융 연합까지 진전하지 못한 유로존은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해 바로 성장 국면으로 들어서지는 못할 것이다. 유럽 각국은 연금제도, 노동시장제도, 경쟁정책 등의 개혁을 진행 중이지만 그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날 정도로 과감하지 못하다. 미국이 재정절벽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더라도 미국 경제 및 정치가 미국의 재정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다. 중국 또한 성장 과정에서 성장통을 겪게 마련이고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현재의 위기는 1870년대의 장기적 불황, 1930년대의 경제대공황 때와 비견할 만한 위기로 간주되고 있다. 현재의 위기와 1870년대, 1930년대의 위기 사이에 놀라운 정

도로 많은 유사점이 발견되고 있고,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5년, 길게는 10년 이상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리라는 가능성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률 70%, 중산층 70%라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목표는 세계적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도전들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 1997년의 외환위기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국은 세계적 수범사례로 칭송받은 바 있다. 사실 멀리 1970년대에 두 차례의 오일 쇼크로 세계경제가 10년 이상 스태그플레이션을 겪는 과정에서도 한국은 고성장을 구가하며 선진경제와의 격차를 줄이는 계기로 삼았다. 세계경제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상황으로 진입하는 모색을 할 향후 10년간 세계 각국은 바로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국이 일자리 확충과 지속가능한 사회정책 패러다임 구축을 통해, 개도국들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들에게, 그리고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사회정책 차원에서도, 한국적 모델을 수범사례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신정부의 정책 역량과 능력 발휘가 그 어느 때보다 기대되는 이유이다. **KLI**